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362
----------	------

제안년월일 : 2020년 3월 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주 문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취약계층의 복지와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고,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의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취약계층은 복지와 방역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으며, 내수경기 위축과 수출 감소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방역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통한 방역체계 강화,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소상공인 등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임.

3. 이송처 : 서울특별시장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위험과 영향 위험을 '매우 높음'으로 상향했다.
- 우리 정부 또한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의료 및 생계지원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함에 따라 봉사활동도 중단되고 복지시설의 휴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방역 시설 및 설비 확충·선제적 방역을 위한 인력 운용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와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한편, 해외 관광객의 감소와 중국을 통한 부품 공급의 차질 등으로 관련 산업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 경기의 위축과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의 침체와 수출 감소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해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 소상공인 등 피해 시민의 부담 경감과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며,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촉구한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방역 인프라와 인력 확충,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의 지원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